

해법 안보이는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찬반 외 현 공항 확충 등 여론조사 문항 평행선 이번주 중 원 지사-특위 면담... 출구 전략 주목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평행선을 달리는 제2공항 관련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문항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이하 갈등해소특위)는 30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도민의견 수렴 방안 협의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갈등해소특위는 제주도와 3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

지만 여론조사 대상과 문항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찬성·반대를 묻는 '1개' 문항만 갖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갈등해소특위는 '찬·반' 문항 이외에 '현 공항 확장 여부'도 도민이 판단할 수 있게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앞서 논의과정에서 현 공항 확충에 대해서 거론된 만큼 현재 찬반만 묻는 것은 특위 목적과 맞지 않음을 피력했다.

강 의원은 "특위는 찬성, 반대 특위가 아니다. 갈등 해소를 위한 특위 이기에 모든 내용을 담아가는 게 목적"이라면서 "이 자리는 여러 의견을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11차 회의를 열고 도민의견 수렴 방안 협의 추진 상황에 대해 이상헌 도 공항확충지원단장에게 질의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다 녹아낼 수 있는 여론조사 방식(도와 의회가) 같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관건인 것 같다"며 도정의 명확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상헌 단장은 "현 공항이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봐 이른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강 의원의 "찬반 외 여

론은 수용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도 "적어도 현 공항을 선택의 대안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이번주 중 원회 롱 지사와 갈등해소특위의 비공개 면담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연내 여론조사 실시를 향한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른지기자

예결특위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14일까지... '마지막 관문' 공기관·위탁사업 집중 심의 종합심사 거쳐 15일 최종 확정



위탁금은 올해 대비 16.8% (1727억원) 증액 편성되고 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공기관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 격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사진, 이하 예결특위)가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면서 최종 손질 규모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2일부터 14일까지 2021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5조8299억원 규모로 올해대비 70억원 (0.12%) 증액 편성됐으며, 제주도교육청은 1조1699억원 규모로 3% 감소했다.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업을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예결특위에 따르면 민간위탁의 경우 올해 제주도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총점이 전년 대비 하락(88.5점 → 86.3점)하고 있는 반면, 내년 민간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올해 대비 5.9% 증가한 4991억원으로, 행정사무를 지나치게 위임하는 사업에 대해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또 예산의 낭비성, 선심성, 전시성 여부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면밀히 살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 사회취약계층에 재원을 배분해 민생경제 활력에 대한 의지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예결특위는 2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시 소관에 대해 종합 심사를 실시하고, 7일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8일부터 14일까지 예산안 조정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심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제6차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확정된다.

오른지기자 eioh@ihalla.com

"행정시 보건복지 계약직 인건비 불용 심각"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 "서비스 질에도 영향" 제주 40억·서귀포 91억 남아

제주시와 서귀포시 보건복지분야 계약직(무기계약·기간제 등)의 인건비 불용액 문제가 내년도 예산 심사와 정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30일 제

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회의를 열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과 6개 보건소 등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사진)은 2019년 부서별 계약직 인건비 결산 기준 평균 약 44%의 불용률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과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의 계약직 인건비 불용률은 각 46%, 제주보건소는 50%, 서



귀포시보건소는 39%에 이른다. 집행잔액의 경우 제주시는 40억원, 서귀포시는 91억원 발생했다.

이 의원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계약직 인건비)예산은 계속 늘리고 있는데 정작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 내년도 예산 규모가 더 늘어나는만큼 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도민들과 체감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서비스를 담당할 직원이 없는 건 말이 안된다"면서 예산만 확보해서는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불용되면서 코로나19 상황 등 중요하고 급한 현안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계약직 인건비에 묶여 버리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날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사회복지 시설이 휴관될까 걱정"이라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도민들의 불안·우울감 해소 등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방안들을 발빠르게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오른지기자

"정부 '4·3수형인' 일괄재심조항 수용 환영"

4·3특별위원회

"수형인 명예 회복 길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사진)는 30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가능하게 한 법무부의 수정법률안 제시는 그동안 명예회복을 위해 힘겨운 법정 싸움을 하고 개선 수형인분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철남 위원장은 "검사가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직권재심은 5·18민주화 운동, 부마항쟁보상법에서 특



별재심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 4·3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나 확실 당하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결정에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면서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군사재판뿐

만 아니라 일반재판 희생자들에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억울한 옥살이와 더불어 연좌제로 고생해야 했던 수형인 분들의 한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개정안의 핵심조항을 법무부가 수용함으로써 향후 법안 통과 심의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른지기자

제주 내국인 면세점 이용횟수 12회로 늘까

정일영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이용 금액 1000달러 상향 포함

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연간 이용횟수를 12회로 늘리고, 이용금액도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제주도 관광객 감소가 면세점의 매출 하락과 협력업체의 경영 및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변국의 면세점 제도 현황을 감안해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부미천기자 bu8385@ihalla.com

개정안은 제주 내국인 면세점 이용횟수를 기존 6회에서 12회로 늘리고, 이용 금액도 600달러에서 1000달러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면세한도는 600달러를 유지하도록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내국인 면세점 제도를 통해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꾀하고 있다. 실제 면세 범위는 중국이 10만 위안(약 1700만원), 일본이 20만엔(약 215만원)이며 양국 다 이용 횟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내 항공·면세·관광업계 생존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증 발급 및 복지 지원 안내

- 제주4·3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복지혜택 내용, 희생자 및 유족증 발급 등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생존희생자 및 유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도 유족들의 자긍심 고취 및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복지 내용

- **생존자 의료비** : 생존희생자로 결정된 자
 - 의료비(도내 지정병원, 약품대 및 입원비 본인 부담 100% 지원)
 - 장제비(300만원 지급)
- **생활보조비** : 생존희생자 및 희생자 배우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
 - (매월지급) 생존희생자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 30만원, 유족 10만원
 - ※ 신청방법 : 도내 거주(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희생자 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 **유족 진료비** : 1954년 유족까지 지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단, 본인부담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머느리 진료비** : 1954년생 머느리까지 지원(자부만 해당됨)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단, 본인부담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2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안내**
 - 지원대상 : 주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
 - 신청접수 : '19. 6. 1.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도내 거주(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희생자 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국외거주(제주도 4·3지원과)
- 신청서류 : 유족증신청서, 위임장,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2매(3×4)
- ※ 신청서 : 읍면동 비치 및 도청 홈페이지 "유족증" 검색

3 기타 복지혜택

- **항공할인** : 제주항공(생존희생자 50%, 유족 40%, 국내선에 한함)
- **주차료 감면**
 - (생존희생자 및 유족 : 면제) 한라산국립공원
 - (생존희생자 : 면제)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 (생존희생자 및 유족 : 50%) 도내 공영주차장,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2부두), 제주항공국제여객터미널(7부두), 한라수목원
- **관람료 무료** : (생존희생자 및 유족)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 **화장장 사용료 무료** : (희생자) 양지공원 등 화장 및 안장비 면제
-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50% 감면** : 부민·하귀농협·S중앙병원 장례식장
- ※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 생존희생자 30%, 유족 20%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과 064)710-8434-6
- (생활보조비) :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사무소(4·3업무 담당)
- (생존희생자, 유족진료비, 머느리진료비) 제주4·3평화재단 064)723-4309, 4340